

# 민주 비명계, '혁신위' 본격 견제 나서

###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부터” 혁신위원 친명계 편중 비판 “전면적으로 당 들여다보아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21일 친명으로 분류되는 혁신위원들이 다수 포함된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 본격 견제에 나섰다.

당 혁신위원회의 친명 편중 인선을 지적하는가 하면, 당 쇄신의 목표가 내년 총선 승리인 만큼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혁신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에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

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전국선거를 두 번이나 패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가올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족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일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상식의 눈으로 혁신의 과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지도부 내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내 평가와 반성을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와 가치를 바탕으로 명분을 가지고 해 온 정치였다"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역 없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당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 시점이 온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혁신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전날 1차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위의 친명 편중 인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혁신위 1차 인선 명단이 공개되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편중 인선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윤형중 의원은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차지호 의원은 이 대표를 대신해 후보 등록을 한 바 있다.

이선호 위원과 이진국 위원도 대선 당시 이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고, 이해식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를 고리로 한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혁신위원들의 과거 친명 행적이 조명되면서, 비명계 일각에선 계파를 안배한 추

가 인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혁신위에 현역 비명계를 포함시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혁신위는 여성과 청년 중심의 2차 인선 작업 외에, 현역 의원 추가 인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혁신위원 인선을 놓고 당내 파열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친명계의 김영진 의원은 혁신위 친명 일색 논란에 대해, "친명계 핵심인 내가 보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명이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오염수' 연대 촉구

### 이태원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이해당사자인 태평양 도서 18개 국가와 국제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제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에게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공동 명의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필요성, 그리고 국제연

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서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관해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으로도 일본 내 방류를 반대하는 의회 지도자와 시민단체, 동남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공교육 경쟁력 제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



“尹 수능발언 사과를” 김영호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수능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

## 서삼석 “인력·장비 보강해 안전한 소금 확보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1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R&D(연구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해수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회 농식품위 현안질 의회에서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

서 의원은 “해수부가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를 일본정부에 묻는 것을 포함해 우리 국민과 어민들에게 보상하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형배 대표 발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통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21일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속 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

한편 민 의원이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중 3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개정 의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야, ‘윤, 킬러문항 제외’ 거센 공방

### 여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 야 “수능 대혼란 피해 아이들”

여야는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능력시험 ‘킬러문항 제외’ 논란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이 대혼란에 빠졌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를 멈추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묻지마 반대’를 하며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입 수능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 바꾸려면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에 대해선, “논술, 면접, 실기, 인·적성 검사 등 또 다른 곳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며 “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교육적 대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하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김기현 “검사공천 없다…尹도 마찬가지로 생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검사 공천은 없고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검사공천, 검사왕국 격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번 말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은 어떠냐고 하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로”라며 “성공

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해야하고 그 뜻에 있어서 서로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을텐데 필요하다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에 승리했던 사례가 아직도 모범으로 회자된다”며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는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원칙적인 것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